
2018 ~ 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 2.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개요	1
1. 계획 수립 배경	1
2. 계획 성격 및 주요 내용	2
II. '13~'17 농정 평가 및 향후 전망	3
1.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한계	3
2.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6
III.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기본방향	10
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10
2. 농정 기본방향	11
3. 농정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12
IV. '18~'22 농정과제 실천계획	13
1.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13
2.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28
3.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4
4.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58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71
V. 자원 조달방안 및 투융자방향	77
VI. 기대효과	78

I.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개요

1. 계획 수립 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품목별·분야별 종합 대책, FTA 국내대책 등 그간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 추진
-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체계 구축 필요
 - 농업계는 성장 위주 농정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농정 발전전략 수립 요구
 - 농산물 수급 안정, 먹거리 안전과 농촌다움 보전 등 소비자, 국민(납세자)의 수요와 관점을 반영할 필요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과거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농정비전과 실천계획 제시
 - 농산물 가격 불안과 소득 걱정 없이 농사짓고, 청년이 찾는 스마트 농업 등 일자리 창출형 농식품 산업으로 도약
 -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하고,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문재인정부」 농정비전과 방향 제시 및 로드맵 구체화

2. 계획 성격 및 주요내용

- (성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도', '시·군·구' 계획의 상위 계획(제14조⑤·⑥)
 - 매년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제16조)
- (내용)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목표, 정부 시책, 자원 조달방안과 함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소비 확대 시책까지 포함

〈 계획의 주요 내용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확대 시책
 - * 대상 : 식용 쌀·보리류, 곡물, 소·돼지·닭고기·우유, 조사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추진 시책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의 조달방안
- ◇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절차) 전문가·농업계 의견수렴과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국회에 제출

II. '13~'17 농정 평가 및 향후 전망

1.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한계

1 농가소득 및 농업 체질

- (주요성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 쌀 고정직불 단가 인상, 밭 직불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금리 인하와 농기계 임대 등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 * (쌀) '12년 70만원/ha → '15년 100, (밭) '15년 26품목, 40만원/ha → '17년 전 품목, 45
 - 시설원예·축산 분야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규제 개선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13: 57.2억불 → '17: 68.3)
 - * 시설원예 스마트팜 도입실적(ha) : ('14) 60 → ('15) 364 → ('16) 1,143
- (한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3.5%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고,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의 지속성은 약화
 - 농외소득·이전소득은 증가한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한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와 농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소득은 정체
 - * 농업소득(천원) : ('05) 11,815 → ('10) 10,098 → ('15) 11,257 → ('16) 10,068
 - 자연재해로 경영 위험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전장치 불충분
 - 농가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 자본투자 부진 등 체질이 약화되고, 농업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감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
 - * 농가경영주 중 40대 미만 농가 비중(%) : ('05) 3.3 → ('10) 2.8 → ('16) 1.1
 - * 총 요소생산성(KDI, '15) : ('81~'91) 1.4 → ('91~'01) 2.7 → ('01~'11) 1.1

2 먹거리 공급체계

- (주요성과)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유통구조와 공급체계 개선 및 식품·외식산업 육성
 - 답리작, 밭 공동경영체 확대 등 식량작물 생산기반 강화
 -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대상, %) : ('10) 54.1 → ('15) 50.2 → ('16p) 50.9
 -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안정제 시범 도입('15)과 직거래와 로컬푸드 확대 등 유통비용 절감
 - * 로컬푸드직매장(개소) : ('12) 3 → ('14) 71 → ('15) 103 → ('16) 148
 - 친환경직불 개선(지급기간 연장, 지원한도 상향) 및 GAP·HACCP 인증 확대
- (한계)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농식품 안전의 사고 발생으로 농정 신뢰도 저하
 - 밀식사육 등에 따른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은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대
 - 친환경 농식품 수요 증가로 친환경 인증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이후 점검·관리 부실화 문제가 대두
 - * 친환경 인증면적(ha) : ('14) 83,367 → ('15) 75,139 → ('16) 79,479 → ('17) 80,114
 -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생활, 영양, 안전 등 통합적 식품정책 미흡
 - 취약계층의 영양지원 정책이 초기 단계이고, 식품·외식산업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의 연계도 미흡
 - 소비자 관심이 큰 안전성, GMO 등 정보 제공이 소홀

3 농업인의 삶의 질

□ (주요성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 노후생활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령자 공동시설 운영과 영농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13: 79만원 → '15: 91), 농지연금 확대('17: 8,631호) 등

- 읍·면 중심지 활성화('17: 272개소), 취약지역 주거개선 등을 추진하고, 농촌 서비스기준 운용으로 도농 간 격차 완화에 노력
-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촌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촌 관광 육성 등을 통해 농가경제 활동의 다각화 도모

* 귀농·귀촌가구(천호) : ('13) 291 → ('14) 310 → ('15) 329 → ('16) 335

□ (한계) 복지 서비스의 도농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농촌 공간정책 미흡

- 난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빈집·폐교 등 농촌의 유휴시설 증가,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등 농촌 환경 개선 시급
 -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간 체계화 필요
- 물리적 기반 정비 중심 사업과 참여주체의 역량 부족으로 일부 시설의 부실화 문제 발생
- 지역 활동가가 적은 농촌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은 부족

2.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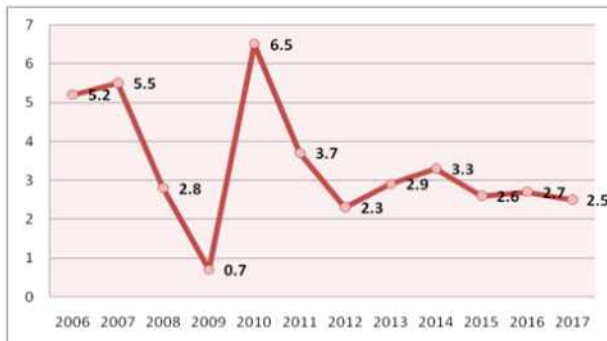
1 외적 여건

□ (인구절벽)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지속 감소, 반면에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

○ 유능한 미래 농업 인력 확보와 함께 고령층이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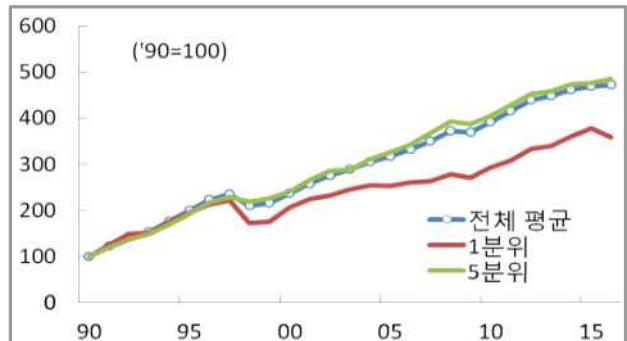
□ (저성장) '11년 이후 2~3%대 저성장 속에서 부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정의·형평성 요구 증대

<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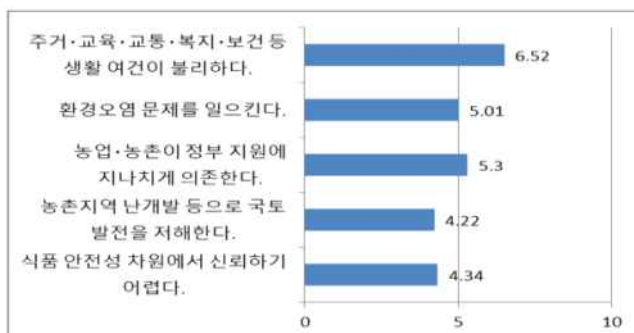
< 분위별 가계소득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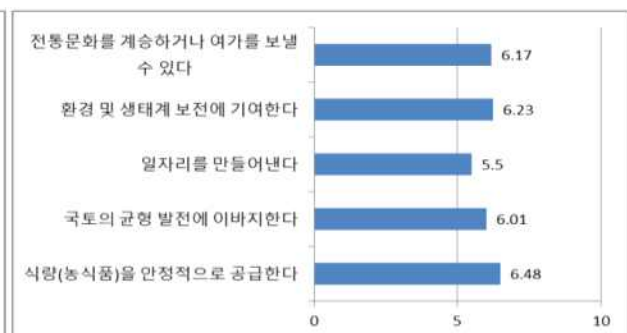
○ 도농·산업 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과 농업·농촌 재정 확대 투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가 관건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 기능 인식>



자료: KREI 조사 결과('17)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기능 인식>



자료: 좌동

□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쏠 산업과 융합되어 경제·사회 구조의 대격변 전망

- 기술발전은 정밀농업 등 농식품산업의 첨단화로 확대되고, 식물·곤충 등 천연자원의 기능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도 가속화

□ (환경변화) 생태계 파괴, 에너지 결핍 등 미래 위기가 예견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필요성 증대

- * 한국은 100년 후 4℃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 전망(한국교통연구원, '12)
- *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 국내 에너지 총 소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

□ (가치 다원화) 소득 외 참여, 공동체, 환경 등 다양한 가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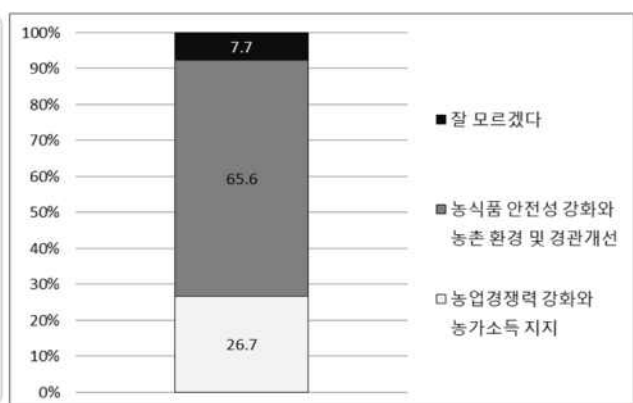
- 치유,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 등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재조명

< 1인당 GDP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



자료: 통계청

< 세금 부담 시 사용 분야 의향 >



자료: KREI 조사 결과('17)

- 자치분권, 주민 참여 확대,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

- 지방의 농정추진역량 제고 및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농정 추진체계 재수립 필요

2 내적 여건

□ (농가경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 및 국제 유가 상승 지속 등으로 농가교역조건은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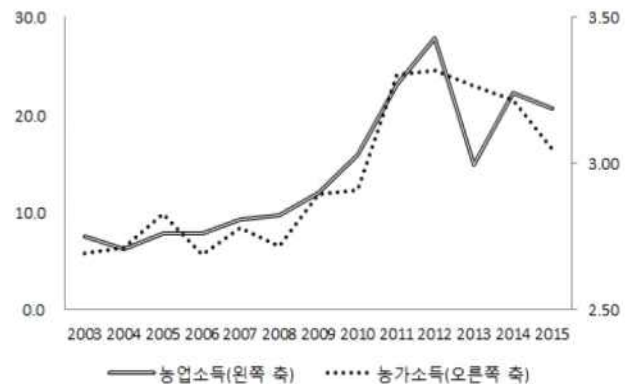
* 농가교역조건(KREI) : ('96) 165.3 → ('15) 101.9 → ('26p) 96.5

○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소득 증가여력이 충분치 않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지속 가능성

<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추이 >



< 상위 25% 소득/하위 25% 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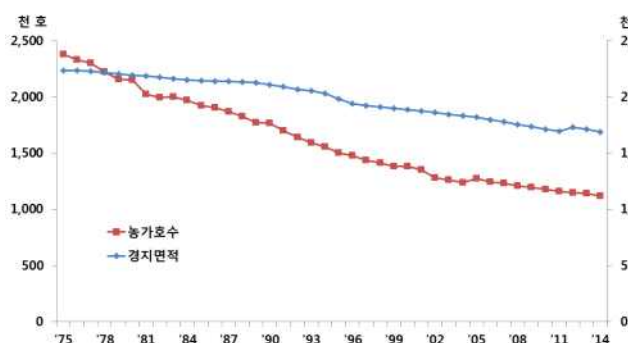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농가경제조사」

자료: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 (농업) 기능성 건강식품, 외식산업, 종자·생명산업 등 농식품 미래 유망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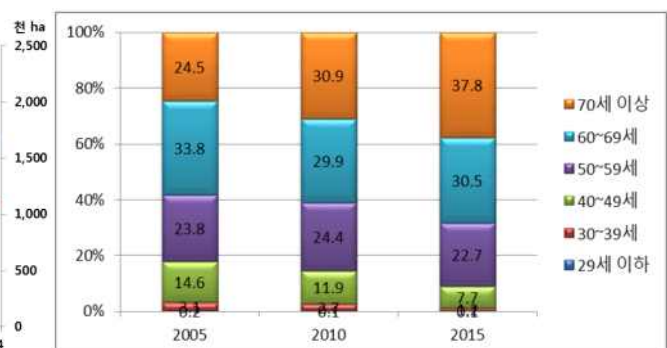
○ 한편, 농가 초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농업인력 유지 곤란

< 농가호수와 경지면적 추이 >



자료: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비중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 (먹거리) 건강·안전 지향 소비패턴이 확산되고, 사회·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

○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증가로,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복지 등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 필요

-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 확대

* 전주시('15), 서울시('17)는 푸드플랜 수립·추진 중이며, 경기·충남·전북·세종 등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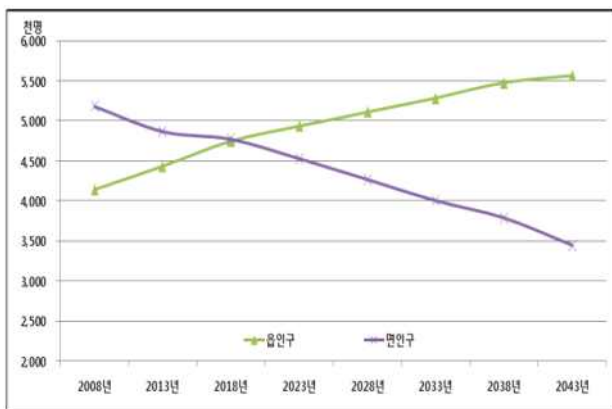
○ 식품 불안정단계에 놓인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 요구 점증

* 식품 안정성 단계(KREI, '17) : 안정 - 불안정 초기 - 불안정 중간 - 불안정 심화

□ (농촌) 농촌 인구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과소화 지역도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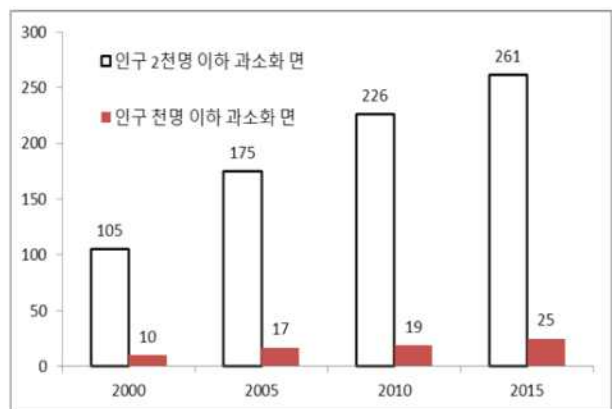
○ 읍 지역은 정주여건 양호, 경제활동 여력 등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반면, 면 지역은 감소하여 읍·면 간 격차 확대

< 읍·면 인구 변화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과소화 면 변화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농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상생 공간으로 역할 확대

Ⅲ.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기본방향

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 (농정가치) 농업활동을 통한 '생산물' →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
 -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공익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 재정립
- ◇ (농정대상) '농업인·농촌 주민' →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
 -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다기능 농업 구현
- ◇ (농정방향) '농업 생산성' 제고 →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
 - ⇒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농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
- ◇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 ⇒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개혁농정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농정체계 구축

《 농정 패러다임 전환 》

	과거	개선
농정 가치	경쟁·효율 강조 산업·성장 중시	사람 중심 소득안정·삶의 질 제고
농정 대상	농업인 중심	국민 전체
농정 방향	생산·공급 관점	농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중앙·지방 민·관 협치농정

* OECD도 환경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민관협력체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한국 농정 평가 및 권고 보고서, 2018)

2. 농정 기본방향

◇ 가격·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인**

- 직불제 확대·개편, 재해지원 등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채소 가격안정제 확대 및 유통혁신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 최소화
- 생산조정제, 소비 촉진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소비구조 전환으로 경쟁력 제고

◇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혁신**

- 스마트농업, R&D 추진체계 개편 등으로 농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청년농 등 미래농업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안심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이력제, 표시제 등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농정신뢰 제고

◇ **사람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지 농촌 조성**

- 정주여건 개선과 농식품 산업 육성, 관광 등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 개발과 농촌 경관 등 농촌다움 복원을 통한 농촌재생 가속화
-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사회적 경제모델 정립·확산

3. 농정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

중점추진과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촉진확충	직불제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 쌀 변동직불제 개편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등 경영비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산업 개편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육성 ○ R&D, 빅데이터 등 혁신인프라 정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 등 미래인력 육성 ○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 등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확산 ○ 축사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 제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과일간식 지원제도 도입 등 ○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위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 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지역개발 등 농촌뉴딜 ○ 산림을 복지·휴양공간으로 활용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 여성농업인의 위상 제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참여와 협력 농정	참여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
	협력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농정·통상·국제농업·남북협력 ○ 현장 농정

추진체계

Ⅳ. '18~'22 농정과제 실천계획

1.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추진 필요성

- 개방화,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소득 정체에 대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 필요
 - 다만, 현행 쌀 중심의 직불제 체제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우박·폭염 등 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 요구 증가

□ 과제 개요

- 농업·농촌의 환경 부담은 줄이고,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개편
 - 특정품목 생산과 연계된 직불제를 통합·재편하고, 환경보전의무 강화, 친환경 직불제 확충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검토
-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대응 강화, 경영비 절감,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시스템 보강
 - 재해복구비 현실화 및 재해보험 확충, 농기자재 유통 효율화, 쌀 수급안정,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및 유통혁신 가속화

□ 기대효과

- 농가 소득 증대, 경영 안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는 여건 조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8) 33 → ('20) 35 → ('22) 40
- 조사료 자급률(%) : ('18) 83 → ('20) 85 → ('22) 87
- 채소가격안정제(%) : ('18) 생산량의 10 → ('20) 20 → ('22) 30
- 직거래 규모(조원) : ('18) 3.3조원 → ('20) 3.8 → ('22) 4.2

직불제 확대·개편	농가 경영 안정장치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유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쌀 변동직불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 재해 대응 농업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안정과 쌀 산업 개편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장치 강화 • 생산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혁신

구분	2018	2019~2020	2021~2022
직불제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개편 로드맵 마련 ▶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구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개편방안 수립 ▶ 밭 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단가 인상 ▶ 시범사업 추진('19~'21)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19) 및 시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 직불제 시행 ▶ 밭 고정 등 직불단가 인상 ▶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개편된 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농가 경영 안정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 피해보장품목 추가(고추) ▶ 농업재해보험 미적용항목(20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 '19~'23 재해대비 농업 생산기반 중장기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무사고 점수제 도입('20) ▶ 경영희생지원대상 확대(목장용지 축산농가 포함, '19) ▶ 권역별 농협 자재유통센터 설립 ▶ 재해지도 작성('20) ▶ 국가단위 외래병해충 예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7:53개→'22:67)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17:6개→'22:12) ▶ 노후농기계 신형 교체('17:10개소→'22:260) ▶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21:295종) ▶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산(~'21) ▶ 농촌지하수 자원관리('17:263개→'21:352)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정제 시행('18~'19) ▶ 쌀 목표가격 재설정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고추) ▶ 상물분리 거래제 시범 도입 ▶ 빅데이터기반 수급예측모델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양곡 지능형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9) ▶ 전국판매연합회 육성('18:2개→'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 공동경영체('17:35개→'22:170) ▶ 고품질 쌀 품종 공급비중(~'22:70%) ▶ 의무자조금('17:5개→'21:14)

1 직불제 확대 · 개편

가.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쌀 고정·밭 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은 통합하고, 농가의 상호 준수 의무(cross compliance) 수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추진일정(안) ('18) 직불제 개편 로드맵 수립 → ('20~'21) 법령 개정 → ('22) 직불제 개편·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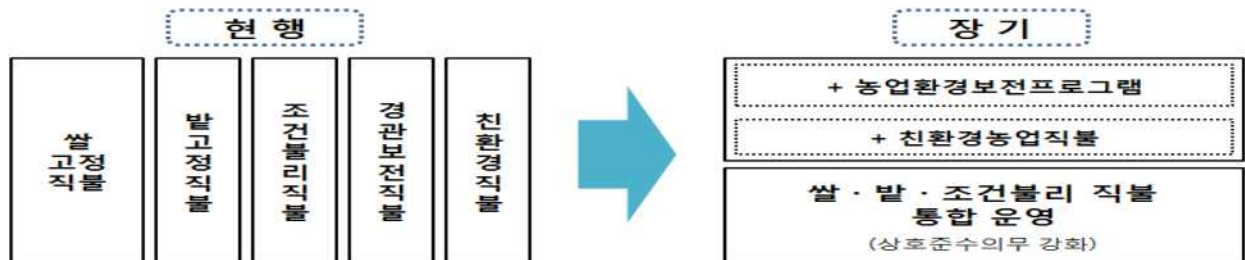
□ 밭 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쌀 고정 직불금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농지관리직불' 도입여건 조성

○ '18년까지 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20년까지 대상 농지·지원 단가·적정 상호준수의무* 등 개편안을 구체화

* (기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 (개선) + 농약·비료 사용 기준 등

○ 「농업소득보전법」 법령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

<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안) >



□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3년으로 한정되었던 지급기한 폐지('18)

(단위 : 만원/ha)

	유기			무농약		
	'17년	'18년		'17년	'18년	
논	60	70		40	50	
밭	120	채소·특작·기타	130	100	채소·특작·기타	110
		과수	140		과수	120

□ 경관보전직불 협약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 내실화

*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18: 50% → '22: 70)인 지구에 한해 사업 참여기회 제공방안 검토

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경관·생태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地區) 단위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일정 지구 내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주민의 활동 지원

- 지자체와 지구 간 환경보전 협약(5년 단위)을 체결, 농업인·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사례 >

- (사업기간·규모) '16~'17년 12억원, 충남 2개 마을 126농가 58ha
- (사업방식) 지자체-마을 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교육·컨설팅, 농가 활동 이행,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급(10a당 6~252만원)
- (사업내용) 복합비료·제초제 미사용, 벚짚환원, 생태둑방 조성·관리, 화분매개곤충용 화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6개 활동

- 지구 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발굴·구성하고, 지구별 관리계획을 수립

- *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 양분 관리, 영농·생활폐기물 수거, 전통농법·농업 경관 보전, 공동공간에 화목·초화류 식재, 생태교란 식물 제거 등

- 지구별로 활동 매뉴얼 보급,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 유도

□ 실증 연구, 시범사업 등을 거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실제 지구를 선정(3~5개 마을)하여 관리계획 수립, 활동 이행·모니터링 등 사례 연구('18: 5억원)를 통해 프로그램 구체화

- 친환경·경관보전·농지관리 등 타 직불제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검토

- * 향후 도입 예정인 농지관리직불의 상호준수의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 조정 계획

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

◇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직불제 개편 및 시행

* ('18~'19) 생산조정제 한시적 추진 → ('20) 변동직불제 개편

□ 단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급 균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변동직불제 개편 추진

○ 쌀 변동직불제의 생산 연계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간 괴리가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반영

□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상황 분석을 토대로 변동직불제 개편안 마련('18)

○ 생산조정제를 통해 타 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쌀 농사로 회귀하지 않도록 작부체계 마련 등 연계 지원

○ 변동직불제의 생산 연계성을 약화*시켜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

- * ① 논에 타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 전작을 유도하는 방안
② 수급농가에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해 직접적으로 벼 재배를 감축시키는 방안
③ 대농 중심으로 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

< 일본 직불제 운영 사례 >

- (쌀 직불제) 쌀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쌀 직불제를 도입('11)·운영하였으나, '13년 개혁을 통해 변동직불('14)과 고정직불('18) 폐지
- (논 활용직불) 주식용 쌀 생산을 억제하고 전략작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재배하는 전략작물(맥류, 대두, 사료작물, 가루용쌀 등)에 직불금 지급

□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변동직불제 개편방향을 마련('18), 「농업소득보전법」 개정('19) 후 '20년부터 개편된 제도 시행

2 농가 경영안정장치 강화

가.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

◇ 각종 재해에도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농가의 경영안정장치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7) 30.1% → ('18) 33 → ('20) 35 → ('22) 40

1 농업 재해지원

- (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범위 확대 및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
 - 재해에 취약한 농작물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17: 53개 → '22: 67) 및 크기·과중 등 품질, 병충해 피해도 보장범위에 추가
 - 사과·배·단감·뽕은감에 10%형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 도입
 - 사과, 배 등 가입률이 높은 품목부터 인접 시·군 통계를 반영한 보험료를 상한선 설정으로 시·군 간 보험료를 격차 완화
 - 전년도 무사고농가 5% 할인 추가('18) 및 연속 무사고 점수제 도입('19) 등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 확대
 - 국가재보험제도를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17: 30% → '18: 70 → '19: 100)
- (복구지원) '22년까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등 현실화
 - 재해보험 미적용 항목(농약대·대파대·시설부자재 등)에 대해 복구지원 단가를 표준소득, 물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기재부·행안부 협조)
 - '18년부터 20개 항목(대파대 14, 농약대 6)에 대해 인건비 추가 반영 (45만원/ha) 등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산정 시 농작물 피해액 포함 추진 검토(행안부 협조)

2 농업 경영회생 지원

- 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 지원 강화
 - (농지활용) 농지 외 온실·버섯재배사 등 부속시설도 매입 추진
(연 1,000호/2,600억 원)
 - 목장용지의 축산농가도 경영회생지원 대상에 포함 추진('19)
 - 판매율 제고*를 위해 지원농가 중간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마련('18)
 - * '06년 지원농가의 '16년 판매율 : 72%(185농가 중 134농가 판매)
 - (자금) 장기·저리(3년거치 7년상환, 1%)의 경영회생자금 지원(연 600억 원)
 - 농업분야 투자 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 지원한도 확대(개인 10억, 법인 15억) 및 사업자 선정 절차 간소화('18)
 - 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

3 수입보장보험 확대

- 대상품목 확대 및 손해평가 간소화 등 수입보장보험 내실화
 - 농가 수요, 보험 도입 가능성 및 가격변동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대상품목 확대('17: 6개 → '22: 12)
 - * ('17)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 양배추, 감귤 등 확대 검토
 -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위해 농가별 손해평가 간소화 방안 마련('18)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의 제도화 방안 검토

나. 경영비 절감

◇ 농기계 공동이용,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조사료 자급률 확대

- * 농기계 공동이용 농가비율 : ('16) 22% → ('18) 24 → ('22) 30
- * 조사료 자급률 : ('16) 80.0% → ('18) 83 → ('20) 85 → ('22) 87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와 밭작물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부담 완화

-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2년까지 590개소로 지원 확대('17: 443개소),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는 '22년까지 290개소에 보급('17: 40개소)
 -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으로 대체('17: 10개소 → '22: 260)
- 밭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8.9%), 수확(23.9%) 작업 관련 농기계를 '21년까지 20종을 추가 개발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보급

□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유통단계 축소 추진

- 가격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
 - * 「농약관리법」 개정('17) 및 시행('18.11),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18)
-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권역별 농협 자재유통센터 설립 지속(~'20)
 - * 권역별 자재 유통센터 : 영남권('17), 중부권('18), 호남·제주권('20)

□ (사료) 가격과 품질 안정화, 조사료 자급률 제고 추진

- 재정 지원(사료원료구매자금, 농가사료구매자금), 세제 지원(옥수수 등 19개 품목 0% 할당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추가 연장('17→ '20)
- 제조·유통·판매단계 전반에 걸쳐 '사료품질관리시스템' 구축('18)
- 쌀생산조정제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18: 1.5만ha), 조사료 전문단지 추가 지정('17: 21천ha → '22: 30)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농가 적응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 이상기상 대응체계 확립('20) : 재해지도, 조기경보시스템 등 구축
- *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가 적응력 향상 : 기후 신제품·재배기술 등 보급

□ 재해지도 등 재해취약성에 기반한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구축

- 지역별·재해별·품목별 재해지도를 작성, 재해취약지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재배 적정성 검토 및 조정(~'20)
-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농장단위 재해 위험도를 분석, 농가에 기상·재해정보와 사전대응 요령 제공

* ('14~'16) 10개 시·군 시범(구례, 남원, 순천 등) → ('21) 전국

□ 기후변화에 대한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적응모델 개발·보급

- 기후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21: 22작부체계)
- 내한·내염성 등 기후변화 적응형 신제품 개발·보급('16: 217품종 → '21: 295)
 - 아열대 작물 등 온난화에 따른 신 소득 작물 도입·확대

* ('16) 13종(망고,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 → ('21) 18종

□ 기상정보, 위험정보, 영농기술정보 등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지역별 재해 취약성, 재배품목 적정성, 대체작목 발굴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상기상 대응센터 설치(도별 2~3개소)

* 기후변화 실태조사(매년) 및 영향·취약성 평가(5년단위)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체계적·선제적 대응

라. 재해 대응 농업 인프라 확충

◇ 가뭄·홍수·지진·해일 등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국경 검역조치 강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 안전 영농기반 구축

- 수계연계 등 용수공급기반 확충으로 수리안전답률 제고('17: 61.4% → '23: 70)
-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을 제고('17: 59.8% → '23: 77)
- 저수지 등의 내진보강대상* 확대 및 조기 보강 추진

* (현재) 총 저수용량 50만㎥ 이상(602개소, '18년 보강 완료) →
(개선) 총 저수용량 30만㎥ 이상(1,241개소, 증 639)으로 확대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원 배출시설 관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으로 농업용수 수질 개선

* 5년 평균 호소 수질기준 IV등급 초과시설 87개소 수질 개선('17: 25개소 → '26: 87)

□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과 예찰 강화

- (수입단계)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은 묘목·종자류 등은 수출국에서 사전 소독 등 위험경감 방안 마련
- (국경검역) 병해충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 된 검역시스템 운영
 - 규제병해충 검출이 많은 고위험품목은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저위험품목은 서류검역으로 검역 간소화
- (국내관리)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발견 및 대응을 위한 통합예찰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확대 운영

* 권역별(16개 시·도) 대학·연구소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 예찰시스템

** ('17) 제주 1개소 신설 → ('18~) 중부, 호남, 영남, 서울 등

3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혁신

가.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

* 벼 재배면적 : ('17) 755천ha → ('18) 705 → ('19) 655

* 쌀 가공산업 매출액(쌀 소비량) : ('16) 4.4조원(44만톤) → ('20) 6(60)

□ (적정생산)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생산조정 이후에도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쌀에서 타 작물로 전환 시 소득차를 보전(평균 340만원/ha)하는 등 '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0만ha 감축('18: 5만ha, '19: 10)

○ 수확기 이전 사료용 벼 전환 등 추가적 수급안정 조치 검토

□ (논 활용 다각화) 쌀 이외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기계화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수매 등 수요·판로 확충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7: 35개 → '22: 170), 기계화 적성 품종 개발 및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등 타 작물 재배여건 조성

- 국내수급과 연계, 콩 등 잡곡류 TRQ 수입량과 정부수매량 조정

○ 생산조정 이후 타작물 전환 농가의 소득 보전과 벼 회귀 방지를 위해 변동직불제 개편과 연계하여 전작보상제 등 도입 검토('19)

* 일본은 논 타작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전작보상직불 시행

□ (고품질화)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친환경 쌀 재배 확대 및 질소 시비량 감축 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제로 개편

○ 밥맛, 기능성 등 고품질 중심의 품종 육성·보급, 육종연한 단축

* 품질 중심으로 보급·매입 품종 전환('22년 고품질 품종 공급비중 70%)

○ 질소비료 시비 감축 등 품질 중심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강화, 친환경 쌀 재배 확산 유도

□ (유통개선) 규모화·전문화 등을 통해 산지 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밥맛 등 품질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

○ RPC 통합 촉진을 위한 새로운 통합모델 발굴 및 인정기준 개선, 시설지원 확대(벼 매입·가공 능력 제고)

○ 식생활·가구형태·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소포장(5kg 이하), 즉석 도정 유통 확대 유도

* 소포장 유통 기반 확대 및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포장 개발 등

○ 소비자가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을 개선* 및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등 도입 검토('19)

* 싸라기 등 품위기준 강화 및 단백질함량 등 품질관련 기준 표시 강화

□ (소비촉진)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가루·쌀가공 산업 활성화로 쌀 수요기반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19~'23)」 수립('18)

○ TV·신문·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초등학생 대상 쌀 중심 식습관 교육(식습관 학교 운영) 및 대학생·성인의 아침밥 결식률 완화 추진
-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가공용쌀 특별공급(가격할인) 지속 추진, 쌀가루 전용품종·제분기술 개발 등으로 활용도 제고
 - * 농협과 연계하여 쌀가루 판매사업 체계화, 규격 표준화 및 홍보·교육 강화
- 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쌀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 지원 등 도입 여건 조성·지원

□ (정부양곡) 특별재고관리를 통해 '19년 이후 적정수준 재고 유지 및 정부양곡 매입단계부터 관리체계 효율화

- 쌀의 연산별 공급용도 지정(예: 3년 보관 이후 사료용 공급), 복지용·가공용 쌀의 품질개선 등을 통한 수요 확대
- 정부양곡 관리를 '지능형 관리시스템'으로 개편
 - * ('18) 업무 표준화(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9) 지능형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2) 전체 도입
- 공공비축제도의 매입방식(직접매입 vs. 입찰), 대금지급, 물량배정기준 등을 고품질 쌀 생산 장려 방향으로 개선 검토
 - 친환경벼 매입('18년 시범), 단백질 검사 기준 도입, 지역별 대표품종 매입 확대 등

□ (목표가격) 쌀값,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차기('18~'22년산) 목표가격 재설정을 '18년 중 마무리

- 국회 동의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차기 목표가격 확정('18)
 - *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목표가격 반영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장치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생산조직 육성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 채소가격안정제 목표 : ('17) 생산량의 8% → ('18) 10 → ('20) 20 → ('22) 30

□ 채소가격안정제,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품목별 가격안정장치 강화

- (노지채소)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과 물량을 확대('17: 무·배추·마늘·양파 → '18: + 고추, 대파(시범)), 평년의 80% 수준으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과수·과채) 자조금,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을 통해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 품목별 수급 조절 거버넌스 구축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주요 채소(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는 중앙주산지협의회에서 적정 생산량을 정하고, 지역협의체가 수급조절 추진
- 조직화율이 높은 과수·과채 등은 의무자조금을 조성('17: 참다래·배·사과 등 5개 → '22: 14),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권한 부여
 - 정부사업(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자조금 교육 실시 등으로 자조금 가입률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BIGFOS) 고도화 등 생산자단체에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출하시기와 물량 등 의사결정 지원

- 드론 활용, GIS 작황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수급DB(생산비, 기상정보 등 28종)와 BIGFOS 통합·운영('18)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 육성으로 수급조절, 판매 강화 등 농협 역할 강화

- *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 : ('18) 마늘, 토마토 → ('19) 양파, 풋고추 등 확대
- 지역 조합 간 합병 등 규모화로 조합 경제사업의 성장기반 구축
 - * 경영개선 조합 선정기준 개선 및 합병 정책자금 확대 등('18)

다. 생산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혁신

◇ 생산자 조직화, 도매시장 운영 개선, 신 유통경로 확산 등 유통혁신

- * 기초 생산자조직 : ('16) 2,229개소 → ('18) 2,500 → ('20) 2,700 → ('22) 3,000
-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비중 : ('17) 27% → ('22) 35
- *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 : ('17) 20% → ('20) 27.5 → ('22) 35
- * 직거래규모 : ('17) 3.2조원 → ('18) 3.3 → ('20) 3.8 → ('22) 4.2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을 지속 육성하여 산지경쟁력·교섭력 확대

- 농가조직화 교육, 지역조합 컨설팅, 공동이용시설(APC) 지원 등을 통해 공선출하회·생산자협의회 등 기초 생산자조직 육성
- 시·군 지역농협, 소규모 농업법인 단위 개별유통을 줄이고, 통합 마케팅 조직(연합사업단, 조공법인) 단위의 유통 비중을 지속 확대

□ (도매시장) 이미지경매,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가격 급등락 완화

- 이미지경매, 견본거래 등을 시범 도입하고('18), 모바일 등을 활용한 상물분리 거래방식으로 확대하여 '20년부터 본격화
- 도매시장 예약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사전예약형 거래비중, '17: 7% → '22: 15)

□ (新유통) 직거래, 소비지 판매채널 확대 등 유통경로 다양화

-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확대*('17~) 및 신규 직매장 연차별 일괄 지원 실시
 - * 로컬푸드 직매장 외 '21년까지 직거래 장터, 인터넷몰 등으로 인증대상 확대
- '20년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공동투자 확대(63개소), 권역별 생활 물자물류센터(5개소), 농축산물 전문매장 신설(1,767개소) 추진

2.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추진 필요성

-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 노동력 부족, 자본투자 확대의 어려움 등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
-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 인력 유입이 부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제약의 악순환 우려

□ 과제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창농과 농산업 분야의 취·창업 확대가 핵심
 - 미생물 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첨단농기자재 등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창의적 인력의 농업 진입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외연 확대 등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
 - 타 부문과의 융합연구와 현장사업화를 확대하고, ‘인력육성-창업·투자지원-기술개발-사업지원’이 연계되는 혁신거점 마련 필요
- 한편, 경제·환경·사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생산 전략 확대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등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생산시스템으로 전환·육성

□ 기대효과

-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지표

- 스마트팜 확대(시설/축산) : ('17) 4,000ha / 790호 → ('22) 7,000 / 5,750
- 반려동물산업 시장 규모(조원) : ('16) 1.7 → ('20) 5.8 → ('22) 6.0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만명) : ('16) 254 → ('20) 270 → ('22) 289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비율(%) : ('17) 5.0 → ('18) 5.2 → ('22) 8.0

과제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스마트농업 육성
- 농식품산업 혁신인프라 정비
- 재생에너지 관련 농가 경영 다각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청년농을 중심으로 미래인력 육성
- 신성장산업 육성
- 식품·외식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 농업 확산
-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 축산업 경쟁력 제고

로
니
맵

구분	2018	2019~2020	2021~2022
농식품 혁신 성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창업보육 시범 운영 ▶ 4차산업혁명 투자전략 마련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농업인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영농형태양광사업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보육센터 설립('19~'20, 4개소) ▶ 스마트팜 단지 조성('19: 4개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19: 60개소) ▶ 한국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검토('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4개소) ▶ R&D바우처방식 투자 확대 ▶ 농식품 융합연구 확대('15:32.6%→'22:40)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22:8개소)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17:1,240ha→'22:1,461)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550명) ▶ 청년영농정착지원제 ▶ 농업법인취업지원('18:150명) ▶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 지원사업 ▶ 반려동물 산업법 제정(안) 마련 ▶ 구매보증보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농고·영농특성화 대학 확대 ▶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 개발 사업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20:160개) ▶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비축량(~'22:15천ha) ▶ 농기자재 개발·보급(~'21:30종) ▶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18:4개소→'22:15) ▶ 한국술 연구소 설립('21)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22:6,400참여농가)
환경 친화형 농축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밀식사육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 개선 ▶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 ▶ ICT장비 표준화 ▶ 쇠고기등급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이력제 도입('20) ▶ 무허가축사적법화 농가별 맞춤형 관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신규지구 조성 확대(~'22:100개소) - ▶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 식용란 선별포장처리업(GP) 유통 단계적 의무화

1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가. 스마트농업 육성

◇ 농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농업 육성

* 스마트팜 : ('17) 시설 4,000ha, 축산 790호 → ('22) 7,000ha, 5,750호

□ 생산에서 유통·소비, 위험관리 등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 (생산) 고추, 마늘, 무 등 노지 채소 분야로 확산하고, 무인 트랙터·드론 방제 등 농작업의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팜 협의체를 통해 핵심기자재 개발·표준화('22 : 30종 개발, 55종 표준화)

○ (유통·소비) 품질·안전 데이터를 생산단계로 환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위험관리) 드론 철새 정밀 예찰('18), CCTV 가금농장 관찰('18), 농가별 기상·재해 조기경보('19) 등 추진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 등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조성

○ (준비)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18), 스마트팜 교육·창업 지원을 전담할 스마트팜 보육센터 4개소 설립('19~'20)

- 스마트팜 단지('19: 4개소) 중심으로 기존 농업인 집적화·규모화 유도

○ (창업) 농식품 벤처펀드를 중심으로 신규 정책성 특수 목적펀드 등 농식품 모태펀드 1조원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추진(~'20)

○ (성장) R&D 바우처 확대 및 농가가 원하는 연구기관·기업과 함께 문제 해결형 R&D 수행과 판로 개척 등 지원

○ (재도전) 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 등 활용

나. 농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정비

◇ 연구개발 개편, 데이터 생태계, 후방산업 지원 등 농식품 혁신역량 제고

- (연구개발) 고질적인 현장문제 해결, 4차산업 혁명 투자전략 마련 등 농식품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편
 - 농업인·농산업체의 의무참여 비율 설정('17: 12% → '20: 22, 양청포함) 및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추진체계 전반을 현장중심으로 개선
 - * (현장참여) R&D 바우처 확대, 농산업체·단체와 매칭펀드 조성 추진
 - * (제도개선) 찾아가는 수요조사 확대, 과제기획·선정 평가시 현장 전문가 비중 확대 및 서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위해 R&D 코디네이터 신규 지원
 - 스마트 팜, 가축질병 대응 등 4차 산업혁명의 농업 접목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추진 및 융합연구 확대('15: 32.6%→ '22: 40)
 - * 생산 정밀화, 유통 지능화, 안전소비, 환경 및 가축질병 대응 등
- (빅데이터) 생산·유통·이력 등 데이터를 망라한 농식품 빅데이터 지도 작성 및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18)으로 활용도 제고
- (후방산업 지원) 민간기업, 창업 희망자, 농업인 등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
 - 스마트팜 전문연구센터 운영(경상대, '17~'23),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후방산업으로 진출 가능한 기술인력 양성
 - * 시설원예·축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23년까지 81명)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 운영('17: 5개소→ '22: 8), 밀착 컨설팅·마케팅 및 투자 유치 등 전 주기적 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첨단 시설 중심으로 리모델링(~'19, 60개소)

다. 재생에너지 관련 농가 경영 다각화

◇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다각화 유도

* 태양광 발전 목표량/사업면적(산업부) : ('22)3.3GW/0.4만ha → ('30)10.0GW/1.2만ha

□ 산업부 등과 협업하여 농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 활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86만ha) 전용 기준 완화, 염해간척지(1.5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 염해간척지 일시사용허가 도입('20),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의 준공시기('15) 제한 폐지 등 농지규제 완화

○ 농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8)

-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송배전 설비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한국형 FIT : 발전 6사 의무구매로 참여 농업인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모델 개발('18)

○ 농산물 생산량, 태양광 발전량, 재해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검토('19)

* (R&D)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16.12~'19.12, 농식품부)

* (시범사업) 8개 광역지자체별 400 농가 대상 40MW 규모('18, 산업부)

□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한국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검토('18)

○ 옥수수, 유채 등 바이오매스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과 연계 방안 가능 여부 검토

□ 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목재펠릿·폐열 등) 설치 확대('17: 1,240ha → '21: 1,461)

○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함께 보급('17: 10,940ha → '21: 14,800)

2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가. 청년농을 중심으로 미래인력 육성

- ◇ '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 창업농 1만명 육성
 - 영농실습과 창업교육 강화 및 농지·금융·기술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진입)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

- 한농대·미래농고·영농창업특성화대학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 * (한농대) 입학정원 470명 → 550, (미래농고, 영농특성화대) 3개교, 5개교 → 도별 1
- 한농대 학과 확대(11개 → 18) 및 첨단유리온실·빅데이터 등 융복합 신규 교과목 개설
- 청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실습교육사업* 도입('18)
 - * 청년 귀농 희망자 50명 선발, 6개월 다수 농가에서 다양한 품목을 실습
- 비농업 분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농·공대 협업 프로그램 확대

□ (정착) 영농의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고, 정착지원금·농지·금융·교육·농기계 등 종합 지원

- (지원금) '18년부터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초기안정자금 지원
- (금융) 청년농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농신보 우대보증 개선
 - * 농신보 신용보증비율 상향(90% → 95), 보증한도 인상(2억 원 → 3)
- (농지) 매입 비축량을 확대하고, 청년농 등에게 임대농지 우선 공급
 - * 농지매입비축량/2030 지원비율 : ('10~'16) 4,383ha/20% → ('22) 15,000/25

○ (교육)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영농 기술과 경험 축적 기회 제공

- 농고·농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지원('18: 150명)

* 최대 6개월간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18)

□ (성장) 기술고도화, 규모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체로 성장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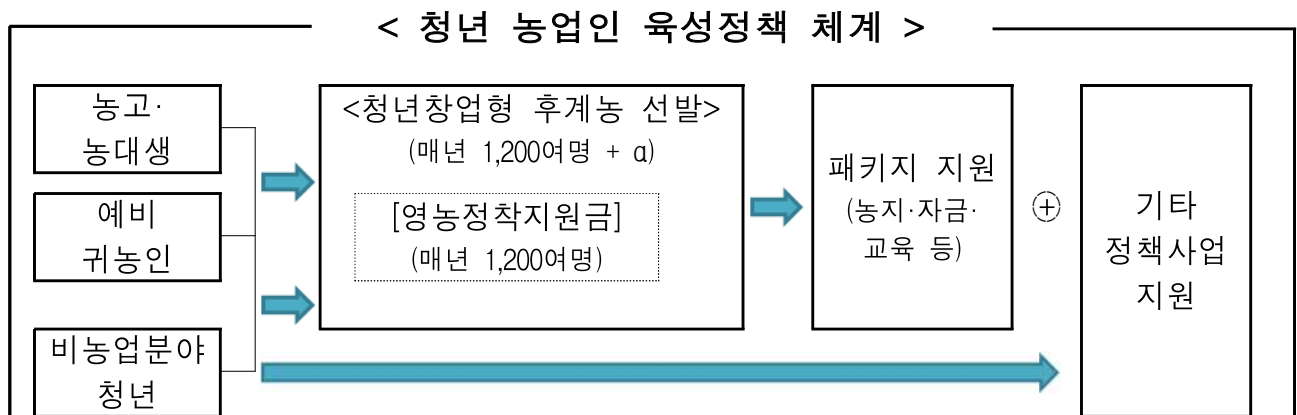
○ 첨단기술실습장 추가 지정('17: 7개소 → '18: 11), 우수강사 영입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 강화

○ 청년농이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 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에서 청년창업농 법인 설립 시 분야별(법무·세제 등) 우수 등급 컨설턴트 우선 배정

□ (지원체계)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수립 의무화, 청년창업농 선발·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청년창업농 5개년 영농계획서 DB 구축 및 기관 간 공유,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교육이력 관리 등 청년창업농 지원 체계 정비



나. 신성장산업 육성

◇ 농생명소재, 농기자재, 반려동물 산업 등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 농생명소재 시장규모(조원) : ('16) 9.6 → ('18) 12.5 → ('20) 16.5 → ('22) 20
- * 농기자재 수출액(억불) : ('16) 17 → ('18) 19 → ('20) 22 → ('22) 25
- * 반려동물산업 시장 규모(조원) : ('17) 2.1 → ('20) 5.8 → ('22) 6.0
- * 정기 승마인구(만명) : ('12) 2.5 → ('15) 4.3 → ('20) 5.7 → ('22) 7

□ (농생명소재)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 새로운 식품원료의 기능성 규명 및 발굴된 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개발’ 사업 추진

- * 주요분야: 항균, 건강증진, 천연고분자, 동물건강, 동물백신, 작물보호, 식물활성 등

- 미생물 우수균주의 효능검증, 약효검사, 제형화·제품화지원 등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 추진('18)

- 소재 탐색을 위한 국내외 기능성원료 DB 구축('18~) 및 주요 효능 성분*을 표준화, 보관·분양하는 ‘기능성 원료 은행’ 구축 검토

- * 예시 :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퀘세틴, 울금의 커큐민, 구기자재의 베타인

□ (농기자재) 농기자재 R&D 확대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 마련

- (R&D) 밭 농업기계, 에너지 절감(보온커튼 등), 환경부하 저감(친환경 비료·농약 등), 생산성 향상(보광등, 장기성 필름 등) 자재 개발·보급(~'21, 30종)

- (수출) 국가·품목별 시장 현황 등 수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기자재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수출지원정보시스템 운영('18~)

□ (반려동물) 서비스업 신설 및 동물의약품·사료의 수출 확대 지원

-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실시 등을 위한 「(가)반려동물 산업법」 제정(안) 마련('18)
 - 신규 서비스업(전시·미용·위탁관리 등) 관리기준 마련 및 동물간호복지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18), 애견미용사의 국가 공인 추진('18)
 - 동물의약품·사료 개발 등을 위한 R&D('17~'19, 총 33억 원) 및 동물의약품·사료생산업체에 시설·운영자금 지원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지원센터('18: 4개소), 동물화장장('18: 2개소) 설치 등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확대
 - 맹견의 수입·공동주택사육제한,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 검토('18)

□ (종자산업) '22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 목표로, 수출전략 품종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 aT-KOTRA 사업 연계,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장개척 지원(~'22)
- 종자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
 - * 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가공 등 종합지원시설 구축('19: 연구용역, '20~'22)

□ (말산업) 승마시설·승마체험 등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 육성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17: 77개소)에 대해 기술연수와 생산비 절감(인공수정, 예방백신 접종,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
- 기존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 개선(연 10개소),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17: 57km → '21: 500) 및 도심형 공공승마시설 설치 지원(연 3개소)

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 식품·외식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 ('16) 254만명 → ('20) 270 → ('22) 289

* 농식품분야 수출액 : ('17) 68억불 → ('20) 80 → ('22) 90

□ (인프라) 인력양성, 제품 개발 지원체계 개편 및 창업·경영 지원 확대

* (식품제조)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91.1%, (외식) 5인 미만이 전체 86.5%

- 지역별 거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을 검토하고, 중소식품 기업 대상 찾아가는 교육지원 확대
- 우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개발, 디자인 등 1~2억 원 내외의 바우처 지급을 통해 경영 지원 확대
- '20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내 160개 기업을 유치하여 연간 매출 15조원 및 2만명 이상 고용 창출 달성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Lab'('18: 16개팀 선발),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희망자에게 실습기회 제공

□ (전략식품)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 '기능성 농식품DB' 구축('18) 및 「(가)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20)을 통해 소재 탐색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표시식품 신고제' 도입
- 민간의 고령친화식품(단품 외 급식·배달식) 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 (농업과의 연계)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공급기반 등 제도 정비

- 영세 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보증 보험제도 도입('18)
- '(가칭)가공용 품종 이용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기업과 연계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17: 4,400 참여농가 → '22: 6,400)
- 국내산 식재료 사용비율 등을 감안, 지역별·분야별 우수 외식업 지구를 발굴(年 5개소)하여 국산 농산물 사용 유도('18)

□ (한식·전통식품 진흥)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 진흥을 통해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대

- 「(가)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한식 진흥 법적 근거 마련 추진('18)
-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운영('18) 및 국내외 요리학교·학원 등 한식 교육기관의 수준 제고
- 한식 조리법, 식재료, 식문화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한식·전통주 해설사' 제도 도입('19) 및 '(가칭)한국술 연구소' 설립('21)

□ (수출확대) 전문 무역상사 및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 판매망, 현지 유통 채널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물류 인프라 확대

- 중소 수출업체는 품질개선·신상품 개발 등에 집중하고, 전문무역상사는 해외 판매에 집중하는 형태의 상생협력모델 발굴
- '24년 물류비 폐지에 대응, 공동선별, 포장, 보관 등 물류단계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국내외 공동 물류 지원센터 지정

가. 친환경농업 확산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유통·소비 기반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을 확산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17) 5.0 → ('18) 5.2 → ('22) 8

□ (생산) 규모화된 기반 구축,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 및 인력 양성

- 쌀·녹차 등 전략품목과 가공·체험·수출단지 등을 연계한 친환경 농업 신규 지구 조성·확충 추진('17: 16개소 → '22: 100)
- 친환경농업 연구센터('08~'18: 10개소) 중심으로 과제 발굴과 기술 개발
- 선도농가·농진청과 연계하여 청년 창농인에게 현장·실습 중심의 밀착 교육을 실시, 신규 친환경 농업인의 조기 정착 지원

□ (유통)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외식·수출 등 다양한 판로 확대

-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17: 1개소 → '22: 9)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경기·전남) 활성화 및 추가 조성(영남권 등) 추진
- 친환경 공공급식, 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의 판로 확충 지원
 - * 직거래 장터·홈쇼핑 런칭 및 온라인몰 입점 지원, 브랜드 전용관 확충('18: 366개소) 등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18), 유기 동등성 협정 등 가공·수출 확대

□ (소비) 인증제도 개선, 소통 강화로 소비자 신뢰와 가치인식 제고

- 인증관리 강화, 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부실인증 예방
 - * 위반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연속 “미흡” 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QR 코드를 활용한 '(가)친환경농산물이력제' 도입('20)
-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체험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교육 확대

나. 축산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 사육밀도,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 축산업 허가 기준 강화로 환경·질병·안전 문제를 원천적으로 저감

□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으로 사육 환경 개선

- 사육밀도, 고정사육, 산란계 강제 털갈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을 마련하되, 농가 부담이 큰 기준은 유예기간 부여

< 주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및 적용시기(안) >

구분		'18	'19	'25
공통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기준없음→25ppm이하) * '19년부터 25ppm, '25년부터 20ppm 이내로 제한		전체 (25ppm)	전체 (20ppm)
산란계	사육밀도 (0.05m ² /마리→0.075)	신규		기존
	절식을 통한 강제 털갈이 금지 (기준없음→금지)		전체	
돼지	임신돈 고정사육기간 단축(기준없음→수정후 4주)		신규	기존
육계	사육밀도 (시설에 따라 33~39kg/m ² →환경평가에 따라 33~39)		전체	
	깔짚 관리 (기준없음→입식시마다 교체)		전체	

* 소, 젖소는 현재 축산법령상 허가기준을 적용, * 협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차단 방역, 분뇨 신속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가축사육업자에게 축사 및 가축관리 의무 부여

- 설치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벽, 비닐하우스에 사용 가능한 자재, 발판 소독조 깊이 등 기준 설정
- 사육시설·가축의 위생 강화, 방역을 위해 출입자 제한, 종업원 등 관계자 출입 시 작업복·신발 착용 의무 등 신설('18)

- **AI 위험지역**(철새도래지 인근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금지 규정 신설 추진('18)
- **허가 기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벌칙 상향**을 포함한 「축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가능('18.6월)
 - 허가자 준수사항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상향('18.6월)
 - * (현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선, 1천만 원)
 - 살충제·소독제 사용 기준 위반 시 축산업 허가 취소 가능('19) 및 무허가 축산업 경영자에 대한 벌칙 상향
 - *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선) 5년/5천만 원
- **농가별 맞춤형 관리, 축산업 허가 의제 도입 및 자금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 농가별 무허가 축사 현황·위반유형 등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관리
 - * 관리카드 구축 : 1단계('17.12, 18천호) → 2단계('18.6, 4천호) → 3단계('19.6, 21천호)
 -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 무허가 축사 발생 방지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축산업 허가시 의제제도 조항 신설로 적법화 절차 간소화
 - 지역 상담반과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 현장 컨설팅 지원
 - 무허가 축사 이전비, 시설 개보수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등 자금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범위 내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력 농가 구제방안 마련

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종축 개량, 사양기술 개선,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 축사 보급 : ('17) 790호 → ('22) 5,750(전업농 25%)

□ (종축 개량) 기후, 사양관리 등 국내여건에 적합한 종축 개발·보급

○ (한우) 후대검정두수, 후보씨수소 선정 확대 등 한우 개량의 효과성 향상으로 출하월령과 도체중 개선('15: 31.2개월, 436kg → '25: 28, 455)

* 후대검정두수 : 6두('16년) → 10두('20년), 후보씨수소 60두→ 90두

○ (돼지) 종돈장간 정액을 교환하는 개량 네트워크 사업 강화를 통해 한국형 두록* 육성 및 돼지 생존산자 수 증가('15: 12두 → '25: 13)

* 외국에서 개발한 두록 품종에 한국 고유의 유전자(예시: 흑돼지 유전자) 삽입

○ (젓소) 양적형질(산유량)에서 질적형질(체세포수, 강건성) 개량으로 변경, 체세포수 감소 및 평균 산차수 증가('16: 219천개, 24 → '25: 205, 27)

○ (산란계·육계) 산란(육용)종계 원종계(GPS)사업 추진 등 국내산 원종계 공급률을 80%로 상향('16: 60%)

○ (토종닭) 삼계용 토종닭 개발, 토종닭 균일화 검정사업 추진

□ ICT 활용 스마트 축사 보급을 확대하여 생산성 30% 향상 도모

○ 축사환경 및 가축 사양관리, 경영분석 등을 위한 ICT 장비 도입 지원

○ ICT 장비 표준화('18)와 통합 DB 관리기관 선정·운영('20)으로 축산 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활용 확대

- 쇠고기 등급제 개편, 달걀 세척·냉장 유통 확대 및 닭고기 가격 의무공시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
 - (한우) '18년부터 마블링(근내지방) 위주 쇠고기 등급제 개편
 - 한우 번식기반 및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
 - * 송아지 생산구조 분석(번식농가 중심 → 일관사육농가), 수급 단계별 번식기반 안정화 제도, 농가 소득 안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돼지) 협동조합형 또는 영리기업형 일관경영주체(패커) 등 육성을 통해 유통 효율화 및 비용 절감 유도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자금, 거점도축장 운영 자금을 자체가공(정육·부산물) 및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젓소)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치즈 등 유제품 자급률 확대
 - 유업체별 원유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등 원유거래 표준화 시행('18)
 - 원유가격이 치즈·분유 등 용도별로 결정되도록 차등가격제 도입('21)
 - * 현재 원유가격은 용도에 상관없이 낙농진흥회에서 단일 가격으로 결정
 -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GP)”을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를 위해 '22년까지 GP 35개소 신·증축 비용 지원
 - 저온창고, 냉장차량 등 냉장 보관유통체계 구축 지원도 병행
 - (닭고기 등)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및 가격 정보 공개('18, 축산계열화법 개정)

3.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추진 필요성

- 그간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가격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국민 공감대 형성에 다소 미흡
- 사회 양극화 등으로 질 좋은 먹거리 접근성이 약화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관련 질환 발생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특히, 먹거리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가 없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소비 체계' 마련에 한계

□ 과제 개요

-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총괄 조정·관리하여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과 전략 수립 필요
- 식량 안보, 농식품·유통 산업, 안전, 영양, 환경 등 농식품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계획 수립
- 다기능 농업, 로컬푸드, 농촌 공동체, 농촌 주민의 식생활·영양 측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 초등학교 과일간식, 농식품바우처 등 전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먹거리 보장

□ 기대효과

-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먹거리 농정 실현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지
표

- 자급률(식량/곡물, %) : ('16) 50.9/ 23.8 → ('22) 55.4/ 27.3
- 식생활 만족도(%) : ('15) 42.0 → ('18) 43.5 → ('22) 50.0
- 원산지표시 이행률(%) : ('17) 95.0 → ('18) 95.4 → ('20) 96.0 → ('22) 96.5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 ('16) 0.41 → ('18) 0.40 → ('22) 0.36

과
제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 지원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 식량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 개선 •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 GAP, HACCP 등 안전·품질관리 강화

로
드
맵

구분	2018	2019~2020	2021~2022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선도지자체 선정(8개소) ▶ 간척지이용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 지역푸드플랜을 원예산업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으로 대체('19) ▶ 국산밀 자조금 의무화('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푸드플랜 본격화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선정('22:100개소) ▶ 맥류공동 경영체 육성(~'22:16개소)
건강한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공동체지원농업(CSA) 시범사업(2개소)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품목 추가(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검토('19) ▶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대상 확대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20:651개) ▶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력 시스템 구축('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간식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어린이 식생활교육 확대(~'22:25개소) ▶ 학교급식 수의계약기준 완화 적용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항혈청 банк 구축 ▶ 매몰지 환경관리 ▶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구축 및 시범가동 ▶ GAP전문단지 조성('19)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규모별 HACCP 인증 의무화('22) ▶ PLS 시행 관련농약 직권등록 확대(~'22: 4,500종)

1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가.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 먹거리 종합적 접근(생산·안전·영양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 (Food Security) 보장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17) 2개소 → ('22) 100 → ('25) 모든 지자체

[국가 푸드플랜]

□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영양·안전·환경 등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차원의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 국가푸드플랜 해외 사례 >

▶ (영국) 'Food 2030'(2010)

- 국민 영양 향상 및 식생활 개선, 식품분야의 경쟁력 확보, 먹거리 생산의 지속 가능성 증대, 먹거리 체계의 온실가스 감축, 음식폐기물 감축재사용, 기술지식·연구·테크놀로지 영향 증대 등

▶ (프랑스) 국가식품프로그램(2010)

- 양질의 식품접근성 개선, 식품공급 개선, 식품관련 지식과 정보의 개선, 소비자 식교육, 식품문화유산의 보전·진흥, 지속가능한 식모델 창출, 식품정책의 긍정적 가치 전달 등을 포괄

○ 정부·생산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아젠다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 구체화

- 건강한 먹거리 보장, 어린이·취약계층 등 식생활·영양 개선, 환경 보전형 생산·생산기반 관리, 로컬푸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함

-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 농식품부 전담 TF 등을 구성하고, 주요 의제(안) 도출

○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토론회,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가 먹거리 전략계획(국가 푸드플랜)' 수립·확정('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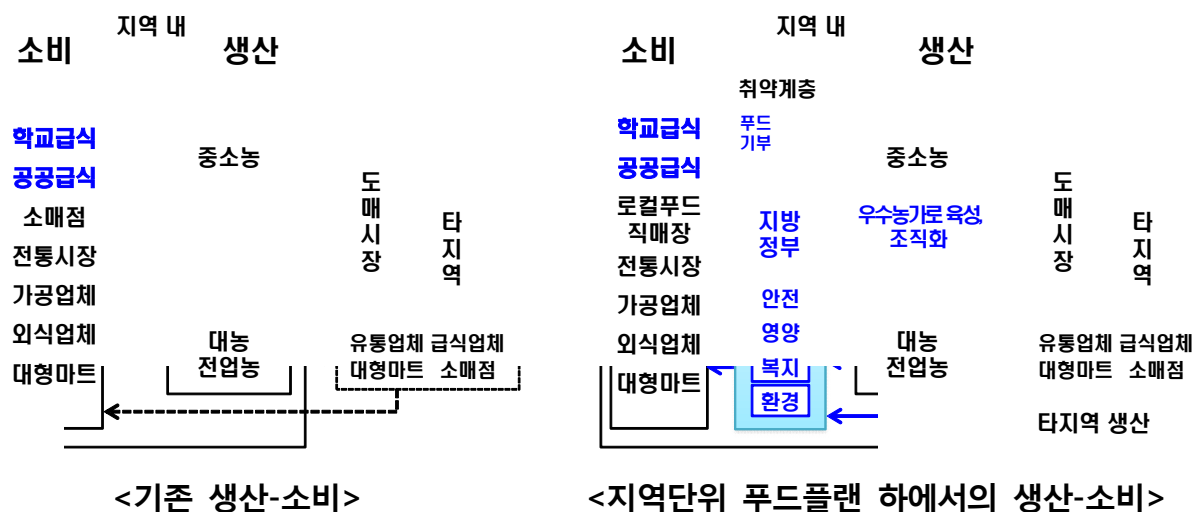
[지역 푸드플랜]

□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수립

-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급식 → 직매장 → 외식·가공 → 대형마트 등으로 점진적 확대

<주요 개념요소>

▶ 기획생산 ▶ 생산-소비 선순환 ▶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 운영조직 설치



□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이행과 관련된 농림사업 일괄 지원 추진

- '18년부터 선도지자체를 선정(8개소, 8억원), 계획수립 연구용역, 기초모델 개발 및 교육·거버넌스 구축(3.5억원) 지원
 - 법적근거(「농산물직거래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역별 설명회 추진
 - 선도지자체를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상호 피드백 실시
-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사업은 유통·소비 분야(산지·소비지 지원사업 등)에서 농업·농촌 분야(농촌지역개발사업 등)까지 일괄 지원 추진
 - 원예산업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을 푸드플랜으로 대체('19)

나. 식량자급률 제고

◇ 쌀은 수급균형 수준 등을 감안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등 목표치 현실화

* ('16) 식량자급률 50.9%/곡물자급률 23.8% → ('22) 55.4/ 27.3

1 기존 식량자급률 평가

□ 식량자급률은 '12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목표치를 밑돌고 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

* 식량자급률 : ('12) 45.7% → ('13) 47.5 → ('14) 49.7 → ('15) 50.2 → ('16) 50.9

* 곡물자급률 : ('12) 23.7% → ('13) 23.3 → ('14) 24.0 → ('15) 23.8 → ('16) 23.8

○ 특히, 자급률이 높은 쌀이 다른 품목의 낮은 자급률을 상쇄

* 쌀 자급률 : ('12) 86.6% → ('13) 89.2 → ('14) 95.4 → ('15) 101.0 → ('16) 104.7

□ (곡물류) 쌀은 자급률 목표치('17: 98%)를 상회하는 반면, 보리·콩·밀은 작황 부진과 낮은 가격경쟁력 등으로 목표치 미달

○ 보리·밀 등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모작 직불금 지원,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생산확대 효과 미흡

□ (과채류) 채소류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종개발 및 재배 기술 향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자급률 목표치를 상회

○ 과일류는 생산량·수요량 모두 증가 추세로 목표치를 약간 하회

□ (육류) 쇠고기·닭고기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목표치 수준 유지

○ 돼지고기는 구제역 등 영향으로 국내 공급량이 줄어 자급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회복 추세

2 '22년 목표치 재설정

(단위 : %)

품 목	'22년 목표치	
	기존	재설정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60.0	55.4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32.0	27.3
주식자급률 (쌀+밀+보리)	72.0	63.6
칼로리 자급률	55.0	50.0
쌀	98.0	98.3
보 리	31.0	36.6
밀	15.0	9.9
콩	40.0	45.2
옥수수	-	8.2
서 류*	99.0	109.0
사 료	44.4	38.4
- 배합사료	24.6	23.6
- 조사료	90.0	87.0
채 소 류	83.0	89.5
과 실 류	78.0	77.4
축산물(육류)	72.1	72.0
- 쇠고기	48.0	42.6
- 돼지고기	80.0	78.6
- 닭고기	80.0	83.2
우유 및 유제품	64.0	54.5
계 란	99.0	99.6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고,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하여 전체 자급률 조정(60.0%→ 55.4)

○ 기존 '22년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5년 단위로 자급률 변경 고시

□ (곡물류) 쌀은 수급안정,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 향상 추진

- 쌀은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수요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기존 목표치(98.0%) 수준 유지

* 식량용 쌀 자급률(가공용·종자용 등 제외) : 125.8%

- 생산조정제 추진, 생산기반 정비 및 기술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쌀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 도모
- 밀은 최근의 수급상황,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15%→9.9), 서류는 최근의 생산·소비 동향('16년 자급률: 104.7%)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조사료)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볏짚 대체 등을 감안, 현 자급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되, 목표치 현실화(90.0%→ 87.0)

□ (과채류) 과일은 수입 증가 및 자급률 하락 추세를 완화하고 (78.0%→ 77.4), 채소는 적극적 생산 확대 추진(83.0%→ 89.5)

- 과일류 소비증가에 대응하여 점차적으로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정책 지속
- 채소류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사업, 밭농업 직불금 확대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 (육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을 반영, 소폭 조정(72.1%→ 72.0)

- 생산성 향상(가축개량, 출하일령 단축, 도체중량 증가, 질병관리로 폐사 감축 등), 사육마릿수 증가 등 성장 추세와 시장여건 반영

□ (우유·유제품) 국내산을 원료로 하는 유가공 제품 수요 증가 노력 등을 감안, 자급률 하락추세 완화(64.0%→ 54.5)

- TRQ 물량, 분유 수입량 증가 등 현 추세 지속 시 우유·유제품 자급률은 크게 하락 전망

3 | 자급률 제고방안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간척지 활용 등을 통해 **생산기반 유지**
 - 농지은행이 보유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량 확대, 임대농지 중 논외의 경우 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의무화 추진
 - 품목별 수급여건 등에 대응한 간척지별 세부 활용계획 마련
 - * 수출원에·복합곡물·수산단지 등 용도별 계획 수립
- 쌀작물 등의 국내생산 확대를 통해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 제고**
 - 쌀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및 국산밀 자조금 의무화**(’19) 추진
 - * 맥류 공동경영체 육성(누계): (’16) 2개소 → (’17) 6 → (’22) 16
 - 쌀 기계화 촉진, 우수 품종 개발 및 저장고 신축(’17: 3동/9,555㎡ (5,600톤 저장) → ’20: 4동/12,855(8,600톤))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요 확보**
 - 쌀은 식생활 교육, 쌀가루·쌀가공산업 육성 등 신규수요 창출
 - 밀·콩·보리와 같은 타작물은 계약재배 등 안정적 판로 구축에 주력, 정부수매·수입량(TRQ 증량) 조정 등 추가수요 확보 노력 병행
- 기후변화, 국제 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내실화하고, 민·관 합동 대응역량 강화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활용, 해외 확보 곡물의 안정적 반입 등 식량위기 대비 대응체계 마련

2 건강한 식생활 지원

가. 어린이, 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 개선

◇ 건강한 먹거리 체험을 통해 균형잡힌 식습관을 형성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식생활 만족도 : ('15) 42.0% → ('18) 43.5 → ('22) 50.0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 '18년 돌봄교실 대상 시범 실시 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급기준
지원대상	돌봄교실	초등1·2학년	1~3학년	1~4학년	전학년	주 1회(150g)
예상인원	24만명	89	137	180	268	연간 30회

*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과정에서 지원대상 범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 인증 과실·과채 등을 간식의 원재료로 공급하고, 컵 과일 등 신선편의식품 제조시설 지원(3개소) 등 전방산업 육성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시범 추진 검토 및 식생활 교육 병행

○ 식품구입에 용도가 한정된 바우처를 지원하여 육류, 과일 등 양질의 식품 섭취와 섭취 품목의 다양화 유도

* 사업 타당성 검토·추진체계 설계를 위한 실증연구 실시('18)

○ 식생활 상담·교육을 병행하여 개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 어린이 대상 교육컨텐츠 개발, 식(食)체험·교육기회 제공

○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학교 등)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교육 확대

* ('16) 시·군·구 당 평균 약 4개(1.5%) → ('22) 25개(약 10%)

○ 연령별 식생활 교육 표준교재 개발 및 표준 컨텐츠 DB 구축

나. 공공급식의 품질 제고

◇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우수 국산 농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급식용 식재료의 안전·품질 관리 강화

-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마련을 위한 소비처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식재료 구매자금(84억원) 지원대상 공급업체는 학교급식에서 복지시설·병원 등까지 확대 검토
 -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 지원(잔류농약검사 연 45백여 건)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
 - 저가 입찰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행정안전부 협조)
 - 각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지역 농산물 우선사용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국산 식재료 사용여건 마련(교육부 협조)
 - 공공급식 운영기관 대상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농과대학,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시범사업 추진
- * Community Support Agriculture : 조직화된 소비자가 농가 경영비를 지불하고, 농가 체험 등을 통한 신뢰형성 및 농산물을 현물로 받는 협력 모델
- 지역 농산물 생산·공급업체와 공공급식 운영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시범 추진('18: 2개소) 후, 성공모델 확산

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

◇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을 통한 농식품 정보 제공

* 원산지표시 이행률(%) : ('17) 95.0 → ('18) 95.4 → ('20) 96.0 → ('22) 96.5

□ 농축산물 이력제 참여농가와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 친환경인증 등 국가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해 생산단계의 이력관리 농가 확대
- 국내산·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 ('18)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품목에 돼지고기 추가 → ('20) 국내산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와 부정유통 단속 강화 추진

-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17: 646개 → '20: 651)

* 생산 및 수입 통계, 표시의 효율성 및 후생효과 등을 종합 검토

- 원산지 단속 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력 시스템을 구축('19),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 강화를 통한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 활성화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및 위반자 의무교육 철저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농림축산업용 GMO의 안전관리 강화

- (수입단계)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심사위원회 보강
- (국경검사) 검사대상품목과 표본 추출량 확대, 검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 검사기법 표준화 등 국경검사 강화
- (국내유통) 모니터링 대상·기간·품목 확대 및 환경영향조사 협업 강화

3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 예방 중심의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농가책임 방역 강화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 ('16) 0.41 → ('18) 0.40 → ('22) 0.36

- (조기 신고) 시·군별 AI·구제역 최초 신고자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100%(현행 80%)를 지급하여 조기 신고 유도('18)
 - 제3자 신고포상금을 상향(100만 원→ 500)하여 조기신고 활성화
- (초동 대응) AI·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AI는 겨울철 발생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하고, 시·군, 신속대응반, 군 인력 즉시 투입으로 살처분 신속 실시
 - 가축질병(AI)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수준 간소화
 - *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개선) 3단계(관심-주의-심각)
- (생산자 책임 방역)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
 - 취약농장 상시 점검과 동절기 이전 축산관련시설 특별점검 정례화
 - * AI 중점관리지구, 밀집사육단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고령농가 등
 -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강화('18)
 - * CCTV 확인결과 방역노력 인정 시(80% → 90% 증액) 등
 - ** 축산차량 미등록·소독설비 미설치(0% → 20% 감액) 등
 -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수의사 채용(위촉) 의무 부과('18)
 - 계약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계열화사업자의 모든 계약 농장 일시(48시간 이내) 이동중지명령 발령

□ **(AI) 가금류 사육제한과 가금농장 CCTV 설치 등 예방·예찰 강화**

- AI 반복 발생지역에 동절기 가금(오리) 사육제한 및 휴업보상 실시
 -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 예방적 수매·도태도 병행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전체 전업농장(5,676개소) CCTV 설치(~'18)로 방역실태 점검 효율화
 - 야생조류·철새에 대한 AI검사 확대 등 대응체계 강화(환경부 협조)

□ **(구제역)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 접종 정례화(4월, 10월) 및 매년 사용 백신의 적합성 모니터링 강화(백신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 일제접종 효과가 낮은 돼지는 취약지역(과거 발생, 감염항체 검출 지역 등) 중심으로 추가 접종 실시
-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 농가는 개선 시까지 지속 관리
- 구제역 발생시 적합 백신 신속 확인(현행, 2개월 → 개선, 3주)을 위해 **항혈청 뱅크**를 구축('18년~), 백신 **국산화** 추진

* 백신 제조시설 구축('17~'19) → 연차별 시범가동('20~'23) → 생산가동('24)

□ **(매몰지 환경관리) 기존 매몰 방식을 랜더링(고온 분쇄) 등을 통한 소멸 방식으로 전환, 기 조성된 매몰지의 환경관리도 강화**

- 랜더링 시설(연간 1개소) 및 이동식 열처리장비 지원 확대('17: 2대 → '18: 20대)로 매몰 축소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부터 **발굴·소멸** 추진('18: 940개소)

나. GAP, HACCP 등 안전·품질관리 강화

◇ GAP·HACCP 확대, 농약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 제고

- * 전체농가 대비 GAP 인증률(%) : ('16) 6.9 → ('18) 9.1 → ('22) 25.1
- * HACCP 인증률(%) : ('16) 37.9 → ('18) 42.0 → ('22) 50.0

□ GAP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안전·위생관리 강화

- 품목별 'GAP 전문단지' 조성('19) 검토, 안전성 검사와 컨설팅 등을 통해 GAP 집단 인증 활성화
 - 타 정책사업(산지규모화·조직화 사업등)과의 연계로 농가 참여 유도
 - 내부관리자제도 신설*을 통해 집단인증 단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
- *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관리·교육하는 내부관리자를 단체원 50명당 1인 운영

□ 업종별·규모별 HACCP 인증 확대

- 산란계 등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은 '22년까지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추진
- * 의무화 사육규모 : 소 100두, 돼지 2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 위생·안전관련 중요 인증기준 미 준수 시 1회 위반에도 HACCP 인증 취소,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 '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사용가능 농약 확대 및 판매기록관리 강화

-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외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시행기관: 식약처)
- 병해충이 발생하나 방제약제가 없거나 부족한 작물 대상 직권등록 확대
- * 방제대상 농약 직권등록수(누계) : ('18) 2,893건 → ('22) 4,500
- 구매자 정보 등 판매기록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이력관리제 도입
- * 「농약관리법」 개정('18), 농약이력관리시스템 도입('19~)

4.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추진 필요성

- 국민 소득수준 향상, 환경·생태가치 선호 등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 한편, 농촌 공간구조가 분화(읍 인구 증가, 면 인구 감소)되고, 고령층·장애인·여성농업인·다문화 가정 등 정책수요도 다양화

□ 과제 개요

- 정주 여건개선 사업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등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촌재생 본격화
 -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농촌 경관·생태·문화 등 농촌다움 보전·복원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 고령농·다문화 가정·청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 교통·주거·보육·의료 등 농촌 특화형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
- 공공 부문의 직접 개입이나, 시장 기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활용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조직과 여성농업인 등 지역 내 역량 제고

□ 기대효과

- 다양한 농촌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삶터·쉼터·일터로서 복합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농촌 조성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지표

- 농촌주민 정주만족도(10점 만점) : ('16) 5.62 → ('20) 6.00 → ('22) 6.50
- 국민연금 지원 농업인(천명) : ('16) 365 → ('18) 375 → ('20) 380 → ('22) 385
- 농지연금 가입(건) : ('16) 6,783 → ('18) 11,283 → ('20) 20,000 → ('22) 30,000
- 농촌관광객수(만 명) : ('16) 1,001 → ('18) 1,150 → ('20) 1,250 → ('22) 1,350

과제

이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 구현

- 통합적 · 체계적 농촌 지역개발
- 농촌 환경 보전 및 정비
- 산림투자와 산림복지 확대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 여성농업인 위상 제고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확충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농업 ·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 귀농 · 귀촌 등 도농상생 활성화

로드맵

구분	2018	2019~2020	2021~2022
이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 추진(10개소)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 임야거래 활성화사업 ▶ 나무의사 자격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지원을 위한 계획계약 도입('19)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 임산물재해보험 확대('20) ▶ 목재산업단지 조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빌리지 조성 (~'22: 1,000개소) ▶ 깨끗한축산농장('22:5천호) ▶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서비스 제공('21) ▶ 산림복지단지 조성('22)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원 택시 확대 실시 (전 군지역, 82개소)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보급('18: 5개소) ▶ 공동경영주 등록절차 개선 ▶ 저소득 농업인 보험가입 지원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19:6,897동) ▶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율 인상('17:50%→'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어린이집 확대 ('17:34개소 → '22:45)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 국민연금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지역 순환경제 ·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 관광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사회적농업법 제정 추진 ▶ 지자체와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산업 지구단위 통합지원('20) ▶ 클라우드펀딩 등 사회적농업 자금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산업 지구('16:13개소 → '22:36)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육성('18:9개소→'22:70) ▶ 청년창농 교육농장 ('18:50명→'22:250) ▶ 귀농닥터 자문 활성화 ('17:500건→'22:800) ▶ 공동텃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8:10개소→'22:50)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21)

1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가. 통합적 · 체계적 농촌 지역개발

◇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인프라 정비

* 농촌 생활거점(중심지/기초생활거점/창의마을) : ('17) 67개소 → ('18) 372 → ('20) 982 → ('22) 1,600

□ 정주여건 개선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 추진

○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도입('19)

-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포함된 사업은 별도 심사 없이 일괄 지원

* 중심지활성화, 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및 교육·문화·복지 등 다분야로 단계적 확대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18: 10개소)

* 혁신주체 양성, 산업인프라 고도화, 생활문화 기반 구축 등 동시 추진 가능

□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보장

○ (중심지) 농촌지역 최상위 서비스 거점으로서, 중심지를 100개소 조성(~'22),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확대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문화·복지 등 배후마을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

○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이용빈도가 높은 진료, 우편 등 기초 서비스(Essential Service) 제공거점 500개소 조성(~'22)

○ (창의마을)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무선방송·안전 가로등 등 생활 편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 빌리지 1,000개소 조성(~'22)

나. 농촌 환경 보전 및 정비

◇ 경관·생태·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다움 보전

- * 국가농업유산 : ('17) 7개소 → ('22) 20 / 아름다운 농촌운동 참여 마을 : ('16) 9,196개 → ('22) 20,000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17) 1,029호 → ('22) 5,000

□ 농촌 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성(Rurality) 회복

- 농업유산, 산림·하천 생태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생태·문화 자원 발굴 및 보전을 위해 농촌다움 복원 사업* 추진

* (예시) 역사·문화 탐방을 테마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토지길'(하동군)

- 도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농촌' 캠페인 전개(상·하반기 1회 이상)
 - 다양한 모델 개발로 참여마을 확대 추진('17: 11,260개소 → '22: 20,000)
 - 농촌 빈집은 공동시설, 귀농인 주거 등에 활용되도록 임대·정비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병행해서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 유도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개별농가·공동자원화의 적정 분뇨처리를 지원하여 잘 부숙된 퇴·액비 생산·공급으로 경종·축산이 연계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 사후관리 매뉴얼 보급, 지정기준 보완 및 악취저감시설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17: 1천호 → '22: 5) 추진
-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 대상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확대 (~'22: 33개소),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 참여 의무화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17: 7건* → '22: 20) 유도

-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 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및 울진 금강송산지농업시스템 등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 보전·관리 강화

다. 산림투자와 산림복지 확대

◇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을 국민의 복지휴양공간으로 재창조

* 경제림육성단지내 산림사업 집중, '22년까지 6만개 일자리 창출, 산촌 거점권역 육성

□ (산림산업)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우량목재 생산 및 숲의 가치 증진
 -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으로 수종 갱신과 임도를 확충, 목재산업 단지 조성('20), 생산시설 현대화 및 목조건축 지원
 -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고, 명승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경관 축 형성
- 임산물재해보험 확대('20), 임야거래활성화사업('18) 도입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안정망 강화
- 산림 재해·복지분야 공공일 자리를 확대하고, 나무의사 자격제 시행('18)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지원

□ (산림복지) 숲을 국민의 복지 휴양 쉼터로 재창조하여 공익 기능 증진

-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숲태교 서비스 제공, 산림치유시설과 수목장립 확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서비스 제공('21)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22)
- 산촌특구를 지정하여 재개발과 귀촌인을 위한 주택 임대·분양을 실시하고, 특구 주변 국공유림을 귀촌인에게 임산물 재배공간으로 개방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가.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 교통·주거·의료 등 농촌 여건을 고려한 특화형 복지 확충

* 농촌주민 정주 만족도(10점 만점) : ('16) 5.62 → ('20) 6.00 → ('22) 6.50

□ (교통) 전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 확대('17: 18개소 → '18: 82),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택시형 외 버스형(콜·셔틀·복합형) 추가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농촌복지 서비스를 배후마을에 전달하는 체계로 활용

□ (주거) 고령자 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보급('18: 5개 시범지구),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정비로 주거여건 개선

○ 에너지 절약시설, 무장애 디자인, 공동체 텃밭 등 주거모델 도입

- 고령자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등 마을공동밥상 지원 병행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개량 조기 철거 확대('17: 1,163동 → '19: 6,897)

□ (보건·복지)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분만취약지역의 분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공공의료 강화

○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 등의 농촌의료봉사 활동을 연계하여 의료사각지대 최소화

○ 분만취약지('17: 34개군) 지정기준* 완화로 농촌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확대 및 대체 분만지원서비스 확충 추진(복지부 협업)

* ① 60분내 분만의료 이용률이 30% 미만, ②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인 지역

□ (보육) 농촌형 보육정책 강화로 농촌지역 출산율 제고

* 농촌 출산율 및 영유아 수('16) : (출산율) 1.41%(전국 1.17) (영유아) 448천명(전국의 16.8%)

- 소규모 어린이집 확대('17: 34개소 → '22: 45) 및 영유아 혼합반 운영 허용 등 추진(복지부 협업)
 -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 교실 등 보육서비스 지속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교육 확대 추진(여가부 협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소)의 전문인력을 소규모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부모 대상 육아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8.9월부터 농촌지역 7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교육) 농촌유학 활성화, 소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 농촌 유학시설과 인적 역량 제고,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홍보 확대 등 추진('17: 유학센터 19개소, 유학생수 216명 → '22: 40개소, 450명)
- 교육부와 협업하여 '1 읍·면 1 초·중학교' 설치·유지전략 마련
 -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완화, 연구학교 지정 및 방과후학교 활용 교육지원 확대 등 추진(교육부 협업)

□ (문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문화활동 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자원 발굴 및 유형화로 지역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17: 문화지원 175개소, 농촌축제 57개소 → '22: 200, 70)

나. 여성 농업인의 위상 제고

◇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직업역량 강화로 양성 평등 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 ('17) 20,433명 → ('20) 125,000 → ('22) 250,000

□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등 양성평등 인식 제고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18), 후계농업인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 유도

* 공동경영주 등록시 배우자 확인 서명란을 삭제,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지자체 종합평가 항목으로 신설('18)
-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해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17: 조합원 31.5%/임원 6.1% → '22: 40%/20)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특화 교육과정(회계, 6차산업, 리더교육) 운영 및 직거래사업 지원 확대*로 직업역량 강화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기준(고시)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반영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도우미 지원 확대, 결혼이민여성 대상 1:1 후견인제 등 맞춤형 복지 제공 추진

* ('18) 연구용역(검진항목, 비용 등) → ('19~'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21) 시범사업

- 도우미 지원범위 확대(출산·사고·질병·취약가구 → 교육도우미 추가), 지원 단가 인상(6만원 → 7), 결혼이민여성 멘토·멘티 풀 1천 건 구축

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 공적연금 지원 확대로 영세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 도모

- * 국민연금 지원 농업인 : ('16) 365천명 → ('18) 375 → ('20) 380 → ('22) 385
- * 농지연금 가입 : ('16) 6,783건 → ('18) 11,283 → ('20) 20,000 → ('22) 30,000

□ (국민연금) 관계부처와 협의,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강화

- 국민연금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17: 91만원 → '21(안): 100)으로 보험료 지원액을 상향하고, 보험료지원 일몰기한('19)도 연장

* 91만원시, 농업인 1인당 월평균 지원액 40,950원 → 100만원시, 45,000원

- 저소득 농업인의 보험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기준 개선('18)

* (현행)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지원 제외 → (개선안) 과세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예: 과세소득 27백만원 미만 지원, 재산 6억원 이상 제외)

□ (농지연금) 가입 활성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농지연금의 자산유동화 등 안정적 지급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감정평가를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18)

-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존상품* 제도개선 및 신규상품 개발

* (기본형) 종신행, 기간형(5·10·15년형), ('17)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 (농업인안전보험) 영세 농업인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17: 50 → 19: 70%),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 유족급여(1억2천), 장례비(1백만→1천만), 간병급여(5백만→5천만), 휴업급여(1일당2만→1일당6만), 재활급여(5백만→3천만), 치료급여(1천만→5천만) 등

- 중장기적으로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 또는 지원 강화방안 검토

3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가. 농업·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는 농촌 관광 육성

* 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6차산업화지구(누적): ('16) 3개소/13 → ('22) 92/36

* 농촌관광객수 : ('16) 1,001만 명 → ('18) 1,150 → ('22) 1,350

□ (융복합산업) 개별 주체 육성 및 지역 특화품목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발전체계 구축·확산

○ 성장단계별 경영체 지원 체계화* 및 인증제 개편('18), 향토사업 등을 통해 개별 산업주체 육성

* (창업) 스타트업스쿨·창업교육 → (도약) 보육매니저·현장코칭 → (성숙) 제품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품목 후보군을 선정, 후보군 내에서 관련 산업주체 간 연계를 지원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구단위 통합지원 추진('20)

□ (관광) 농촌 현장·주민 주도의 농촌관광 정책으로 전환

○ 현장활동가,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현장 농촌관광협의체가 지역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청년농·귀촌인 등을 농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 멘토링시스템 도입(연간 200개소) 등 운영주체의 역량 제고

○ 불시·사후평가 신설, 우수등급 대상 정책사업 우대 등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화

- 농촌관광 개념 정립 등 법령 정비* 및 정기실태조사** 실시

* '도농교류법'에 농촌관광 개념 명시, '농어촌정비법' 상 관련조항 분리·이관 등

** 소비(농촌여행·농촌체험학습)·공급(사업자)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등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18) 9개소 → ('20) 30 → ('22) 70

□ (인력양성) 귀촌교육 개편*, 귀촌 희망자 DB와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귀농·귀촌자를 중심으로 핵심인력 육성

* 빈집정비·텃밭 가꾸기 외에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절차 및 운영 방법' 추가

○ 한국농수산대학에 '농촌 사회적 경제 특별과정' 개설 추진

□ (성장지원) 창업·자금·판로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도모

○ 다목적회관, 폐교 등 지역 유휴시설은 창업에 활용하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에 정보 제공

○ 크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지원 방안 검토

○ 공영홈쇼핑, 농협,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이용한 판로 지원

□ (공동체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 도모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활동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육성('18: 9개소 → '22: 70)

○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연구 및 「사회적 농업법」* 제정 추진('18)

* 사회적농업 개념,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 명시

다. 귀농·귀촌 등 도농상생 활성화

◇ 귀농·귀촌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고, 도농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도농상생 확산

- *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 가구 비율 : ('17) 8.0% → ('20) 10.0 → ('22) 12.0
- * 농촌재능나눔 참여시간 : ('16) 85,353시간 → ('22) 92,000
- * 도시농업 참여자수 : ('17) 1,833천명 → ('20p) 3,000 → ('22) 4,000

1 귀농·귀촌 활성화

□ (관심단계) 유형별(소득형·전원생활형 등)·단계별 수요자 맞춤형교육 강화

- 영농기술·6차산업·창업 등 분야별·특성별 교육과정으로 재편
- 현장실습형 '청년창농 교육농장'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 후 창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대상 교육 강화('18: 50명 → '22: 250)

□ (예비정착단계) 귀농닥터* 활성화로 귀농 희망자의 정착 지원

* 선도농가·신지식농업인이 영농기술 등 각종 정보 제공, 애로사항 상담 등 실시

- 귀농닥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우수 귀농닥터 자문한도 확대 등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17: 500건 → '22: 800)

□ (정착단계) 일자리 정보 제공, 주거지원 및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융화 지원을 통해 종합적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지역 일자리 DB 구축 및 귀농귀촌인의 재능과 연계하여 일자리·소득 창출 지원
- 귀농인의 초기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귀농·귀촌 주택단지 추진(LH, 6개 시군)
-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발굴 및 지역문화제 등 소통 활성화

2 도농교류 확대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도농상생 공감대 확산

○ 기업·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활동과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연계

*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확대('17: 76 → '22: 200)

○ 아동·청소년,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교류기회 확대

-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와 연계하여, 초·중학생의 농업·농촌
및 직업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체험 활성화

* 우수 체험학습처 선정, 품질·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해 체험학습처 관리를
체계화하고, 초·중학교의 행정·비용부담 경감

○ 도시민의 농촌 체험기회 확대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확대

□ 생산물직거래, 기술교류, 정보교류 등 도시농업 활성화

○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18: 10개소 → '22: 50) 등 도시
농업인과 농업인 간 교류의 장 확대

○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기술교류,
팜파티, 정보공유 등 상생사업 확산* 유도

* 지역 농업인단체와 도시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등

○ 도심지 내 농지를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법」 개정 추진

□ '21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으로 농업 관련 유물·전시물
체험 및 교육을 통해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도모

* ('17) 체험관 기본설계 → ('18~'20) 실시설계 및 공사 → ('21.상) 준공 및 개관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 추진 필요성

- 과거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요 투자 결정을 하는 국가주도 경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정 성과 거양
- 경제·사회 변화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화 사회에서 중앙정부 주도 방식은 이러한 변화 대응에 한계

□ 과제 개요

- 중앙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기획, 지자체는 세부사업 집행 등 역할 분담 추진
- 지방분권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 농정추진역량을 제고하고, 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농정 추진체계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개편 병행
-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환류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책임농정 시스템 구현으로 정책 혁신 추진
- 한편,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산업의 외연 확대

□ 기대효과

- 참여를 통한 분권과 협치의 농정 틀 마련으로 지역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지역 주도적 농정 실현

1 참여 농정

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18)으로 농어업·농어촌 다 부처 연관 업무 조정 및 중장기 발전방향 협의

- (배경) 농어업·농어촌 관련 다 부처 사안 조정 및 중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기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원적·공익적 가치 실현 방안 등 협의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수산자원·해양 등 다 부처 관련 업무 총괄 조정
 - 농업 대내외 여건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식량안보, 국토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 (운영) '18년 설립·운영을 목표로 법제화 추진, 위원회 구성과 하위 규정 마련 등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본 위원회(30명 내외)와 함께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지원기구 구성
 - 본 위원회는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는 농업, 농촌, 먹거리·수산 분야에 대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 참여
 -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대통령, 국회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및 대국민 홍보 실시

나.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으로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 구축

* 농어업회의소 운영 : ('17) 8개 → ('20) 24 → ('22) 50

□ (배경) 농업인을 대표하는 민관 협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위상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기능) 농업·농촌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의 중요한 농업·농촌 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업 정책의 자문·건의 및 위탁 사업 수행,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등

○ 농어업회의소와 지역 주민이 연계·협력 가능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사업 발굴 추진(농업인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 거창농어업회의소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사업, 찾아 가는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등 추진

○ 기존 농업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유 역할과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모델 연구('18)

* 프랑스(1920~), 일본(1951~) 등 선진국 농어업회의소는 농정 자문을 포함한 농업인교육·훈련, 농촌관광, 농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운영) 법제화('18) 및 시범사업 확대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 매년 5~10개소 기초·광역 시범사업 지역 선정, 컨설팅사업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 참여율 향상, 농업인단체와 공감대 확산

2 협력 농정

가. 지방농정 · 협치농정 강화

◇ 지자체 농발계획과 중앙정부 예산 연계,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하고 협치농정 실현

□ 각 지자체가 자체 농정 여건과 농정 방향을 바탕으로 5년 단위('19~'23) 농업 · 농촌발전계획 수립 유도('18)

○ 중앙은 지방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계획과 연계한 중앙정부 예산 배정으로 지역 농발계획 내실화

- 농식품부 소관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농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하고, 농업 관련 정부업무평가와도 연계

*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19), 농업 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타 사업으로 확대 추진('20~)

○ 지자체 농발계획에 대한 주기적 이행 점검과 우수 지자체 시상 등 환류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제고

□ 지방 자치농정 역량 강화 및 중앙 업무의 지방이양 확대

○ 중앙과 지방 간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농정 연계 시스템 활성화(농식품부-행정부지사 · 농정국장 회의 정례화)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발굴·이양하는 방안 검토

□ 농업계의 대의기구 설립 지원과 농업계 기관 간 연계 강화

○ 지방 농정심의회 운영 활성화, 농업회의소 육성 등 지역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기관 · 단체간 연계 · 협력 지원

나. 통상 · 국제농업 · 남북협력 강화

◇ 관세 ·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확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 추진

* 검역협상 타결 품목 수 : ('16) 14건 → ('18) 15 → ('22) 16

* 해외농업개발 운영기업(보고 기준) : ('16) 38개 → ('18) 40 → ('22) 43

□ (통상)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를 줄이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 · 비관세 장벽 해소

- 국내 생산, 소비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협상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마련, 관계부처 · 농업계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해외 시장개척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수출을 위한 민관의 비관세 장벽 대응능력 강화

□ (국제) 국제 농업협력과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내실화로 국격 제고

- FAC('18: 460억 원), APTERR 등 국산 쌀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 확대
- ODA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현지점검 및 관리강화
-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각화, 권역별 진출 거점지역 육성 및 안정적인 국내반입 지원 등 종합적인 사업체계 정비

□ (남북농업)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 협력 추진

- 산림, 가축질병 등*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 우선 추진

* 접경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대응, 황폐 산림 복구, 가축질병 예방 지원 등

- 신뢰형성 단계에 따라 상호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 추진

* (1단계)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

* (2단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 농기자재 지원, 황폐산림 복구 등

* (3단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계약재배, 남북한 상호보완 생산체계 구축 등

다. 현장중심의 정책개혁

◇ 현장에서 보고 듣고(Field), 기존 틀을 파괴하는 혁신적 정책 추진과 (Innovation),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고(Responsibility) 농업인과 공감(Sympathy)하면서 신뢰(Trust)를 구축하는 FIRST 농정 추진

□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농정 체계화

과거		새로운 방향
■ 장관 중심	⇒	■ <u>쏠</u> 직원이 주체로 참여
■ 민원 대응	⇒	■ <u>정책 개선</u> 성과 창출
■ 단발성	⇒	■ 이행상황 <u>확인·평가</u>
■ 인센티브 없음	⇒	■ 우수사례 <u>발표·포상</u>
■ 정보 未공유	⇒	■ 우수사례 <u>공유 네트워크</u> 구축

○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무자의 행동지침 안내

* 현장농정의 방향 및 목표, 현장건의 입력관리, 조치 및 통보 절차

○ 현장의견 수용 노력, 정책 개선 이행단계를 정량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사례에 대해 현장 만족도*를 재점검(분기별)

* 실제 제기한 의견 확인, 요구사항에 부합 또는 합리적 대안 제시여부 등

○ 우수사례는 장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온라인 네트워크 (예시, 온-나라 포털 등)를 통해 공유하여 자발적 확산 유도

□ 현장농정을 능동적으로 내재화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농정 확대

○ 농식품부 본부가 선도적으로 현장 중심농정을 실현하고, 추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

○ 보고대회(분기), '농업인의 날' 등에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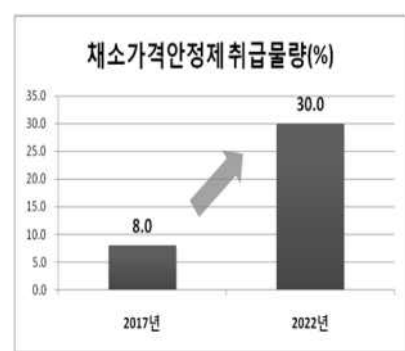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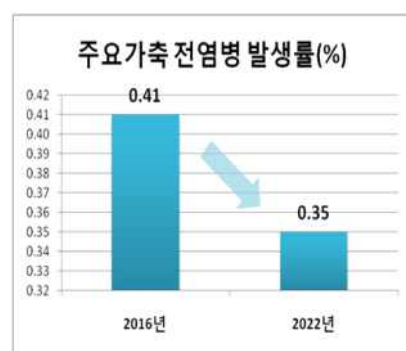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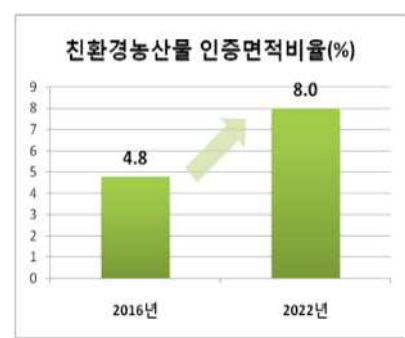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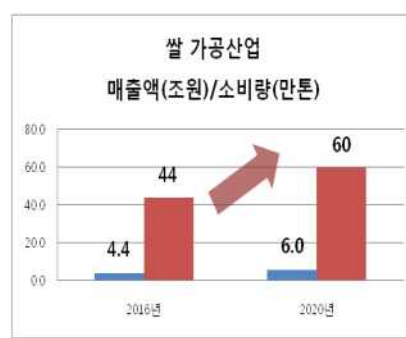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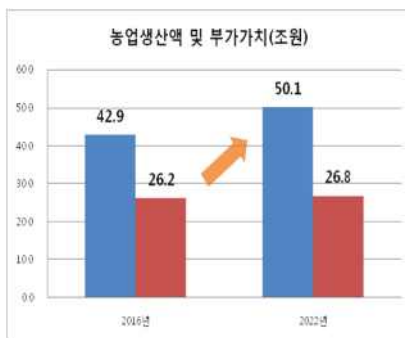
V. 자원 조달방안 및 투융자방향

-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
 - 쌀 중심의 재정 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수급안정 체계를 통해 가격지지 예산 절감
 - * 쌀 관련 예산 : ('16년) 5.3조원 (예산비중 37.0%) → ('17) 5.7조원 (예산비중 39.3%)
 -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재해예방, 완공소요 중심으로 투자하고, 성과 미흡·유사 중복 사업은 구조조정
 -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및 환경친화형 축산 전환 등 농정구조개편에 활용
 - 지자체가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매개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정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일괄 지원 추진
 - 문재인정부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18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농업 분야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지속
- ◇ (신규사업) 쌀 생산조정제, 쌀 식량원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농식품 바우처, 가축질병치료보험, 과일간식,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 ◇ ('17년 대비 증액사업) 발·조건불리·친환경직불, 농업 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공동방제단 확대·운영, 농촌형 교통모델,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 기타 신규·증액사업은 '18~'22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과 '19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진시기 등을 검토
- FTA 국내대책,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기존사업의 세출구조 개편도 추진

Ⅵ.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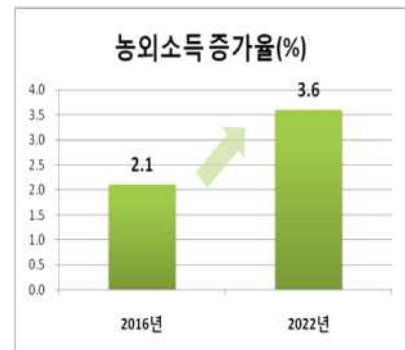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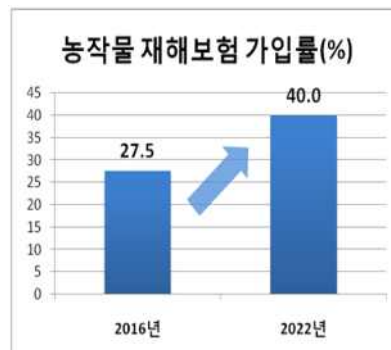
1 농 업

- 기상이변, 가축질병 대응력 향상 및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농업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증가
 - 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 개편 등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품질 중심의 쌀 부가가치 제고 등 쌀 산업 발전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발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 해외곡물의 안정적인 반입 등 전 국민의 안심 먹거리 기반 공고화
 -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건강한 먹거리 공급
 - 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전환, 축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가축질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축산물 수급불안정 최소화
- 채소가격안정제 대폭 확대로 생산자의 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가격불안 해소



2 농가 경제

- 청년 창업농을 중심으로 고령화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혁신성장기반 마련
- 재해보험, 경영희생지원제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재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및 가격 불안 등 농가의 경영위험 최소화
- 농업인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및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수준 향상



3 농 촌

- 정주 인프라 정비, 교통·주거·보육 등 농촌 특화형 복지 향상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환경·생태·전통문화 등 농촌다움 보전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구현

